

민주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국가 시스템 붕괴…공동위원장 이상민 장관 책임도 철저히 추궁”

“잼버리 K팝 콘서트 BTS 동원 요청 병영국가 공권력 갑질”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잼버리 공동조직 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파행 관련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 점검, 일정 관리, 사후 조치 부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냐.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으로, 여당인 국민의 힘 기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 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고 싶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논의 내용이라며 “잼버리 대회의 무능한 개최로 대한민국 국적이 추락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있었냐”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비상 대책단 간사인데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에 이번 잼버리 대회 마지막 일정으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 참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권력 갑질”이라며 맹폭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사적 실패를 BTS로 무마하려는 속셈”이라며 “공권력 갑질로, BTS가 봉이냐.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동원 부대쯤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공산당식, 독재정권식 발상”이라고 쓰아붙였다.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인 황희 의원은 SNS에 “삼성 아들이 군대 가면 정부가 핸드폰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현대 아들이 군대에 가면 현대차를 마음대로 갖다 쓸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BTS의 사적 능력을 국가가 맘대로 감추할 권리는 없다”며 “복무 중인 BTS에게 자유의사를 물어 답을 얻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위계에 의한 강요”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왜 강제로 동원하려는지 병영 국가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태”라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국가가 망친 행사를 만회해보려고 정치적으로 BTS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의도가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K팝 콘서트 지원 인력으로 공공기관에서 1000명을 차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능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김영관 애국지사회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을 온 국가가 나눠지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무능 정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연합뉴스

잼버리 개최 수년 전부터 국회서 부실 우려 수차례 경고

여가위 검토보고서·국정감사

기반 시설 미비 등 문제점 지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는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가 수차례 제기됐다.

대회를 9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보고서는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 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집회장 조성 공사는 2022년 5월, 하부 기반 시설 공사는 2022년 6월에 들어와서 착수됐다”며 “여가부는 (아영장 상부시설 및 전력·통

신시설) 설계용역을 2022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공사발주와 착공을 모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작성된 ‘2021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이월이 발생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본 행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초 본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사전 행사인 ‘프레 잼버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대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잼버리의 사형적으론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 ‘프레 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회 준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과다한 인건비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미 대회 준비 초창기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2018년 11월 작성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인건비 책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명확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491억원, 약 5만 명 규모의 청소년 캠프 형태 세계잼버리대회의 조직위 구성을 약 9조 원 총사업비에 100만 명 규모의 평창올림픽에 준해 책정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회 준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북 김재·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경고를 여러 차례 나왔던 만큼, 오는 12일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되면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야, ‘수해 지원법안 8월 국회 처리’ 협의 내주 마무리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중으로 수해·피해지원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야 수해 대책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

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수도도 하겠다”며 “8월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F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처리를 논의 중이다. 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연합뉴스

정부, 우크라이나 ‘평화 워킹그룹’ 동참…‘재건 참여 교두보’

정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개념으로 ▲ 핵 안전 ▲ 식량 안보 ▲ 에너지 안보 ▲ 포로 석방 ▲ 러시아군 철수 ▲ 국경 회복 ▲ 전범재판소 설립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45개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정당한 평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 공식 실무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나 정상회의 개최도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을 토대로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논의 틀에 동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대규모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 참여 ‘교두보’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